

미국 정유기업 “폭리 조사” 직면

고유가로 이익 과도계상 여부 청문회 추진 ... 11월 중간선거 이슈로

치솟는 석유가격 때문에 때론을 번 미국 정유기업들이 미국 당국과 의회의 잇따른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의 테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과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에 정유기업들의 폭리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미 언론매체들이 4월22일 보도했다.

또 해스터트 하원의장 대변인은 “정유기업들의 이익이 과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 청문회가 열리면 정유기업들의 폭리 여부는 물론 ExxonMobil을 비롯한 정유기업 임원들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정유기업들이 최고경영자들의 퇴직금으로 엄청난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리 레이몬드 ExxonMobil 최고경영자가 2006년 초 스톡옵션과 보너스 등 총 3억5700만달러의 퇴직금을 챙긴데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정유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고유가로 휘발유값이 폭등해 미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정유기업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도 FTC에 서한을 보내 미국 정유기업들이 과거 여름철 석유소비성수기 때에는 가동율을 98%까지 높였으나 4월초 현재 가동율은 85%에 그쳤다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측은 거대 정유기업들과 가까운 공화당이 정유시장의 폭리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고유가 문제를 11월 중간선거 이슈로 본격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6>